

창업 활성화 · 투자 인프라 조성 확대

전북도, 116개사 406억원 지원... 언택트 사업분야 전환 · 지원기관 연계 강화 등 추진

전북도가 코로나19로 인한 창업·고용환경 변화, 국내·외 전자상거래 성장, 비대면 소비시장 확대에 맞는 창업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언택트 시대에 맞는 창업환경 조성

먼저,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언택트 사업분야 전환을 희망하는 기업 70개사에 16억원의 청년 고용 인건비를 지원해 기업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청년의 일자리를 확대한다.

창업기업, 대·중견기업 간 애로사항 해결 및 상생을 위한 신규사업으로, 스타트업 7개사를 대기업·중견기업 등과 파트너로 연계해 공동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위한 사업화 자금(기업당 5,000만원 이내)을 지원(4억원)한다.

창업기업이 죽음의 계곡(Death valley)을 극복하고 꾸준한 매출 성장을 낼 수 있게 글로벌 창업기업(18개사)의 해외 판로개척을 지원한다.

특히, 올해는 창업기업(20개사)의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해 라이브커머스 지원, 온라인 유통업체 다각화를 통해 다양한 판로를 적극 지원한다.

또한, 베트남 호치민 현지에 해외 판매거점으로 조성된 코레도비엠텔을 통해 지속적인 상품 홍보와 판매도 지원한다.

▲창업기업의 투자 인프라 조성 확대

도내 기술력과 성장잠재력을 갖춘 유망 창업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투자 인프라 조성 확대를 위해 노력한다.

올해는 현재 조성된 벤처펀드, 액셀러레이팅 투자 자금을 이용해 8개사 33억원을 지원한다.

추가로 모태펀드를 유치해 신규펀드 350억원을 조성한 후, 전북도 성장동력산업 분야(탄소·융복합소재 부품, ICT, 기계, 바이오헬스, 그린에너지 등)의 스타트업, 중소·벤처기업 등을 육성할 계획이다.

더불어, 지역엔젤투자 인프라 조성을 위해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와 함께 엔젤투자 활성화 프로그램도 지원한다.

▲기술창업 활성화를 위해 창업지원기관 연계 강화

도는 기술창업 촉진과 지속 가능

한 기술창업 환경 조성을 위해 '전북도 기술창업 지원 조례'를 제정(2020. 12월)했다.

올해는 기술창업 활성화 전략 마련을 위한 기초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기술창업 인프라 중 하나인 메이커스페이스 전문랩(특목 365) 운영 활성화로 메이커 문화 확산, 전문메이커를 육성한다.

또한, 전문메이커가 창업과 연계될 수 있도록 다양한 창업지원 기관과 유기적으로 협력할 계획이다.

아울러, 전북 전략산업 집중육성을 위해 작년에 출범한 '전북도 창업기관 협의회'를 통해 25개 창업지원기관 간 연계·협력도 강화할 계획이다.

/유호상 기자

학교 주변 청소년 유해요인 단속

전북도, 3월 19일까지 유해업소 · 식품 제조 · 판매 업소 대상

전북도 도민안전실 민생특별사법경찰팀은 개학기를 맞아 학교 주변 청소년 유해업소와 위해 식품 제조·판매 업소를 대상으로 22일부터 3월 19일까지 기획 단속을 실시한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도내 학교 주변 부정·불량 식품 유통을 차단하고, 청소년 유해요인을 단속해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에 기여하기 위해 실시한다.

민생특별사법경찰팀은 민간에서 위촉된 생활안전지킴이와 함께, 민간 합동단속을 펼치는 등 형식적인 단속을 피하고, 실질적인 효과를 거둔다는 계획이다.

식품 제조·판매 업소에 대한 주요 단속 내용은 ▲보관관리(냉동·냉장 보관 등)의 적정성 여부, ▲유기성분 경과제품 및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 사용 여부, ▲무신고 또는 무표시 제품 식품을 식품 제조에 사용 여

부, ▲기타 영업자 준수사항 준수 여부 등이다.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한 주요 단속 내용은 ▲청소년 대상 유해약물(주류, 담배 등) 제공 및 판매 행위, ▲노래방·PC방·찜질방 등에서 청소년 출입불가시간 위반 행위(22시~익일 09시 출입불가),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에서의 청소년 출입·고용 행위 등이다.

민생특별사법경찰팀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수칙 준수 여부도 점검한다.

또한, 단속기간 내 청소년보호 캠페인도 실시한다.

민간에서 위촉된 생활안전지킴이 30명과 함께, 학교 주변, 청소년 밀집지역 상가 일대에서 홍보 전단지 6,000장을 배부하는 등 현장에서 청소년 보호에 동참할 것을 호소할 계획이다.

/유호상 기자

전북도, 산지 복구예치금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단가 변경

전북도가 산지를 전용하거나 토석채취 등 일시로 사용할 경우 예치 및 부과되는 '복구예치금'과 '대체산림자원 조성비' 단가를 변경했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산지 전용 및 사용기간에 맞춰 복구를 담보하기 위해 허가권자에게 예치하는 산지복구 예치금액은 지난 16일부터 전년 대비 2.2% 상승했다.

복구비 단가는 산지전용지 및 채광·토석채취(채석, 토사채취)지의 사업별, 경사도별에 따라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이다.

또한, 산지전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매년 고시단계에 따라 복구비 인상분에 대해 추가 예치해야 한다.

아울러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을 때 납부하는 부담금으로 지난해보다 1.0% 정도 소폭 인하됐다. 단위면적당 부과되는 단가는 준보전산지 m^2 당 6,790원, 보전산지 m^2 당 8,820원, 산지전용제한지역 m^2 당 1만3,580원이다.

박성호 도 산림복지과장은 "산지 복구비 및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산림을 불가피하게 개발할 때 이를 복구하고 대체할 수 있는 산림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원천자가 예치하고 부담하는 것"이라며 "산지를 다른 용도로 개발하려는 사람은 반드시 예치하고 납부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



한국판뉴딜 점검 TF 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 김용범 기획재정부 차관이 지난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6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를 주관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전북도, 지하수 방치공 일제 원상복구 추진

전북도가 지하수 방치공 200여 공에 대한 일제 원상복구에 나선다.

'방치공'이란 관정개발 과정에서 수량부족, 수질불량 등의 사유로 개발에 실패한 관정과 상수도 대체, 소유자 변경 등 사유가 중지된 관정이 수질오염 방지조치 없이 그대로 방치된 지하수공으로 소유주가 불분명한 관정을 말한다.

지하수 방치공은 관정내 시설이 부식되거나 지표에 노출된 관정으로 지상의 오염된 지표수나 농약 등 오염물질이 지하수를 직접 오염시키는 원인이 된다.

도는 지난 2009년 국토교통부의 불법 지하수 전수조사를 통해 발견된 방치공에 대한 원상복구를 진행했다. 전수조사 결과 도내에는 약 1,692개

소가 발견됐으며, 그동안의 복구공사로 현재는 186공이 남아있다.

다만, 국가 주도의 원상복구 사업이 지난해 종료되면서, 남아있는 186공의 복구 처리에 대한 난관에 부딪혔다.

1공당 200만원의 소요비용에 대해 처리 의무자인 시·군이 예산 부족 등의 사유로 난색을 보였기 때문이다.

이에, 도는 시·군에 도비를 지원하며, 남아있는 지하수방치공을 원상복구해 지하수 오염의 원천 차단에 나설 계획이다.

/유호상 기자

농촌축제 지원사업 본격 추진

전북도, 농림축산식품부 공모 10개소 선정

전북도는 지난해 농림축산식품부가 주최한 '농촌축제 지원사업' 공모에 10개소(계축5, 신규5)가 선정됐다.

전국적으로 선정된 축제도 69개소에 불과하다.

농촌축제는 농촌 생활과 경관·전통 등을 소재로 한 마을·권역 단위 축제 지원으로 농촌 공동체 활성화와 도농 교류를 유도한다.

특히, 마을 단위의 주민이 계획·실행하는 공동체 축제로서, 전통을 계승함과 동시에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소외계층의 적극적 참여 유도를 통해 여성 및 고령 노인들의 복지증진과 효를 실천하는 경로사랑 고취의 축제가 기대된다.

전북도는 효율적인 컨설팅 과정을 통해 농촌축제의 기본 목적에 맞는 축제 운영방안을 제시하고, 축제 주제를 소규모로 구체화해 10개소에 1억1,400만원을 투입, 농촌축제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실제 축제지원 사업을 신청하는 수요가 매년 증가하는 추세로, 매년 대상마을(개소당 1,000만원~1,800만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조효일 도 농촌활력과장은 "농촌축제가 준비부터 실행까지 마을주민이 주체가 돼 주민 모두가 참여하고, 함께 만들어가는 효사랑축제로 발전해 경로사랑 고취는 물론 농촌 활력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

여성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사업 '호우'

농촌의 고령화와 여성농업인의 농작업 역할 증대와 관련해 전북도의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사업'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사업은 농작물의 재배·수확·선별·포장 등 단순 반복적인 농작업으로 근골육통, 관절통 등 근골격계 질병 발생률이 높은 여성농업인의 농작업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맞춤형 지원 정책이다.

지난 2019년 농작업대 1종 500대로

시작한 이번사업은 삼라농정위원회와 설문조사, 여성농업인의 의견을 수렴해 지원기종을 점차 확대했다.

올해는 휴대용 예초기를 추가해 총 5종(농작업대, 이동식 충전분무기, 고추수확차, 충전운반차, 휴대용 예초기)에 1,000대가량 지원할 예정이다.

전북도가 지난해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88%가 이번 사업에 만족한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나타냈다.

/유호상 기자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www.ijmaeil.com